

## 종합·해설

도청별관 일부 존치…문화전당 어떻게 되나

# 설계부터 다시…비용 늘고 개관 차질

당초 2012년보다 2년 이상 개관 늦춰질 듯

지역사회 논란 빚은 국책사업 좌표수정 선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옛 전남도청 철거 입장에서 물러나 별관의 일부를 존치키로 함에 따라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문화전당 설계안을 철회해 문화전당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책사업이라도 해당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좌표를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선례로 남게 됐다.

◇향후 일정=문광부는 앞으로 문화전당 설계자인 유규승씨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등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보존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별관이 완전히 보존되거나 시·도민대책위원회 등이 주장하는 '제이트안(5월의 문)', '3분의 1 존치안' 중 한 가지가 최종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3안'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별관 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별관 존치안인 '5월의 문'(별관 1.2층 일부를 헐어 문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문화전당의 개관시기는 당초 2012년에서 2014년 5월이나, 14년 7월로 미뤄진다. 이는 당초 별관 철거를 전제로 한 문화전당 설계안보다 14개월 늦춰진 것이다.

설계 변경에만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당초 별관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계가

문화전당 설계원안을 고수했으나,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별관 철거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민의 정서를 감안, 보존 방법으로 기습적 게이트 안(5월의 문)으로 해 주되 구체적 방법은 정부에 일임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시장의 건의를 존중하되 보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은 "별관을 보존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 김영진, 조영택 의원 등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박차 추진위 위원 7명 추가 위촉

광주시가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추진 주체측 최근 동향, 향후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지역의 저명인사 7명을 유치추진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 광주 유치추진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후보지 결정이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14일 경남 마산시와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한

국민민주주의전당 유치전의서를 기념사업회에 제출하고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여전히 서울지역을 후보지로 염두해 두면서도 지방의 후보지에 대해서

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유치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임원진을 대상으로 위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유치활동도 병행 추진하는 등 광주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기념사업회 등 관련 동향 파악도 전략적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광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

하다"며 "향후 한국민주주의 전당 후보지 결정 때까지 전당 유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의 전당'은 3만5천여평의 부지에 1천 400억원의 국비를 들여 건립될 예정이며 상설 전시관과 사료관, 연구소 등을 갖추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권 그린벨트 언제, 어디가 풀릴까

## 광산구~장성군 경계 집중 개발 가능용지 크게 늘 듯

전국 7대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보존가치가 비교적 낮은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해제의 기본 방향으로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방지,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환경영향 평가 3~5등급 지역이면 서 동시에 면적 20만㎢ 이상 등을 정해 두고 있다.

이번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을 수행중인 광주발전연 구원(이하 광주연)은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합천군 등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30%의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 내년 말 장소·면적 최종 확정

### 문화·체육·산업용지로 활용

◇개발 가능용지 크게 늘 듯=광주시와 전남 각 시군의 기존 해제 예정면적 각각 25.07㎢, 20.72㎢에서 이미 해제가 완료된 지역은 20.41㎢, 15.38㎢ 등이다. 이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잔여면적 각각 4.66㎢, 5.34㎢에 불과했던 광주시와 광역권 내 전남 각 시군은 오는 2020년까지 개발 가능용지를 추가로 각각 7.52㎢, 6.21㎢씩 확보함으로써 향후 도시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연도 30%의 추가 해제가 필요한 사유로, 광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외 개발 가능용지 확보 곤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도시성장관리에 필요한 도시용지 공급을 들었다. 또 전남도는 ▲계획관리지역의 활용 가능성 제고 ▲

대도시권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우수한 입지 활용 ▲광주광역권 대책화 주제 반영 등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침대로 3~5등급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장성군과 광산구 경계 등 광주의 서쪽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 지

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총량만을 결정하며, 정확한 장소나 면적은 광주시와 광역권 내 전남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올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을 가정하면, 빨라도 오는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나 도시 외곽 녹지 파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5개 시군의 면적 2천995㎢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은 554.77㎢다. 광주연 정하숙 박사는 "공청회는 계획을 수립한 뒤 의견을 수립하는 첫 단계으로 앞으로 의견수렴·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야 결정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녹지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세기보정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적인 신뢰와 품질  
국내 최고의 신뢰와 품질

국내 최고의 신뢰와 품질  
국내 최고의 신뢰와 품질

국내 최고의 신뢰와 품질  
국내 최고의 신뢰와 품질